

VII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외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외화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야 함

■ 심상철은 외환위기조짐

-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으로 다소 주춤하던 환율오름세가 다시 급등세로 전환
 -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단순한 대외 불균형으로 보기에 환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름
 - 환율등 주요 경제 변수들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경제 전반에 타격
 - 환율이 급등세를 지속할 경우 환투기와 환차손 등의 부작용 초래
 -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연계될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
 -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외화 유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야 함
 - 아울러 불요불급한 수입을 가급적 줄이고 수출을 늘려 경상 수지 적자를 축소시켜야 함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3. 13)

■ 은행 감독원의 금융사고 방지 대책

-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
 - 정책당국은 여신위원회 도입, 여신특별약관적용, 부실화 우려시 신규사업진출 금지, 계열사 담보금지 등의 대책 제시
 - 또 편중여신을 막기위한 개별은행별로 동일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 고려중
 - 제도상의 개선보다는 건전한 금융풍토 조성이 필요
 - 불건전 여신의 발생은 제도 보다 원칙을 무시했거나 운영 미숙에서 발생
 - 금융기관의 자율·책임경영 여건 조성이 필요
 - 소유규조 개편과 규제철폐가 가장 확실한 대책임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3. 14)

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상의 개선보다는 실질적인 금융기관의 자율·책임 경영의 여건 마련이 필요

공공요금의 인상은 민간의 임금 동결 노력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

■ 공공요금 올려선 안된다

○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조짐

- 상반기중 가스값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예정
- 공공교통요금도 인상 움직임
- 현 상황은 개인 서비스요금을 비롯 다른 물가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의 인상시기가 아님
- 인상요인이 있다면 조세감면등 다른 지원방법을 사용하여야 함
- 민간부문의 감량 경영 노력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함
- 공공요금의 인상은 민간의 임금 동결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안임
- 또한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환율 불안과 한보사태의 여파로 통화량이 늘어 인플레이 심리가 매우 강함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3. 15)

고유가 정책으로만으로는 에너지 절감에 한계. 에너지 효율화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

■ 고유가정책 문제있다

○ 산업용 에너지 소비는 줄고 경제활동과 무관한 에너지 소비만 급증

- 휘발유값이 작년말에 비해 100%가량 증가하였으나 1월중 소비는 작년 동월 대비 28.8%나 증가
- 그러나 1월중 산업 부문의 석유제품수요 증가는 전년 동월대비 0.5%로 급락
- 96년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수입액 총액은 196억 6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의 13%에 해당
- 97년 1월중 수입액은 작년동월 대비 50%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에 주원인이 되고 있음
- 에너지 고가정책만으로는 에너지 절감에 한계
- 과소비 억제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
-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

(「내외경제신문」, 97. 3. 7)